



수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신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문의	경제정책팀(권오인 팀장, 최예자-정택수 간사 / 02-3673-2141)
일자	2016. 2. 22 (월)
제목	[보도]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총 19매)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 없어
- '경제민주화' 분야 완전이행률이 33%, 80점으로 자랑하던 정부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어
- 박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해 국민신뢰, 국민통합 노력 저버려
- 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 정치 및 정부개혁 공약들이 많아
-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복지 및 교육공약 들이 많아

1. 경실련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집권 3년차 현재 이행수준은 물론, 집권 3년차였던 전년과 비교하여 그 증감여부가 어떠한 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충, 일자리창출, 주택정책, 외교통일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와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는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의 수준이 달려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

다.

3.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공약자체가 추상적이거나, 판단자료가 없을 경우 기타 '판단불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집권 4년차(만 3년)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41%(273개), 후퇴이행 39%(260개), 미이행 20%(134개)로 나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아 임기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표> 대선공약 이행결과

(단위 : %, 개수)

공약 영역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 불능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국민대통합(5)	0%(0)	0%(0)	0%(0)	20%(1)	100%(5)	80%(4)		
검찰개혁(19)	16%(3)	16%(3)	32%(6)	32%(6)	53%(10)	53%(10)		
정치쇄신(17)	6%(1)	18%(3)	24%(4)	18%(3)	71%(12)	65%(11)		
창의산업(14)	7%(1)	14%(2)	79%(11)	86%(12)	14%(2)	0%(0)		
행복한농어촌(62)	19%(12)	19%(12)	77%(48)	74%(46)	3%(2)	6%(4)		
정부개혁(27)	22%(6)	22%(6)	44%(12)	52%(14)	33%(9)	26%(7)		
행복한일자리(48)	19%(9)	29%(14)	40%(19)	38%(18)	42%(20)	33%(16)		
편안한 삶(27)	37%(10)	52%(14)	37%(10)	41%(11)	26%(7)	7%(2)		
정보통신(27)	33%(9)	37%(10)	33%(9)	33%(9)	33%(9)	26%(7)		4%(1)
지속가능국가(58)	31%(18)	38%(22)	24%(14)	24%(14)	41%(24)	34%(20)	3%(2)	3%(2)
안전한사회(24)	21%(5)	33%(8)	54%(13)	46%(11)	25%(6)	21%(5)		
경제민주화(18)	28%(5)	33%(6)	22%(4)	28%(5)	50%(9)	39%(7)		
힘찬경제(51)	41%(21)	47%(24)	37%(19)	41%(21)	22%(11)	12%(6)		
외교통일(30)	20%(6)	23%(7)	53%(16)	53%(16)	27%(8)	23%(7)		
장애인(26)	54%(14)	65%(17)	19%(5)	23%(6)	27%(7)	12%(3)		
문화가있는삶(58)	48%(28)	41%(24)	17%(10)	41%(24)	33%(19)	14%(8)	2%(1)	3%(2)
행복교육(77)	61%(47)	64%(49)	18%(14)	21%(16)	19%(15)	13%(10)	1%(1)	3%(2)
행복한여성(56)	75%(42)	75%(42)	18%(10)	18%(10)	7%(4)	7%(4)		
국방(21)	38%(8)	29%(6)	52%(11)	57%(12)	10%(2)	14%(3)		
행복주거(9)	44%(4)	44%(4)	44%(4)	56%(5)	11%(1)	0%(0)		
합 계(674)	37%(249)	41%(273)	35%(239)	39%(260)	27%(182)	20%(134)	1%(4)	1%(7)

주) 판단불능은 공약자체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

5.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29% 수준에 불과하였 습니다. 노동관련 공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개혁운운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 령은 최근 해고를 쉽게 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노사관계 개선 공약은 완전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시급 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 놓음과 동시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정부가 80점으로 자랑하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하여, 정부의 주장 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체계 개 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공약은 완전이행 된 것이 없었습니 다.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재벌 총 수들에게는 관대한 친재벌 정책과 원샷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재벌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경제민주화 정책은 중단하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분야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경제력집중 심화와 끊이지 않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 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면세점 사업과 같은 재벌 특혜사업제도 개선, 실효성 있 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폐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 박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 선공약집에서는 국민통합을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표현하고 있고, 정치쇄신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 정부개혁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와 정부의 개혁, 국민통합에서 나올 것인 데, 이에 대한 저조한 이행률은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신뢰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는 반증입 니다.

8. 최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행복주거 분야는 **완전이행률 이 44%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주거 공약은 처음부터 전·월세 대책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 함되지 않아, 공약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만큼, 박 대통령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받고 있 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9. 복지공약으로 볼 수 있는 ‘편안한 삶’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나 다른 공약에 비 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게 보이지만 내용을 볼 때,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되어 공약달성을 위한 재점검이

요구됩니다.

10. 종합적으로 볼 때,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으로 대다수 정치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공약들 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이행률이 낮았던 분야와 대다수 중복되어, 개선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됩니다.

11.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이었습니다.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주로 복지공약과 교육공약 부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하여 1년간 완전이행률은 4%p(24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후퇴이행은 약 4%p(21개)가 늘어났으며, 미이행률은 7%p(-)48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이행률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미이행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전부 가지 않고, 여전히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년간의 성과치고는 저조하다고 평가됩니다.

13.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해 완전이행률 변화가 없는 분야는 국민대통합(0%), 검찰개혁(16%),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행복한 여성(75%), 행복주거(44%)로 조사되었습니다. 완전이행률의 증가가 많았던 분야는 편안한 삶 (+)15%p, 안전한 사회 (+)13%p, 정치쇄신 (+)12%p, 장애인 (+)12%p, 행복한 일자리 (+)10%p 등이었습니다.

14. 박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노동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경제양극화 심화를 시키는 잘 못된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중단함이 옳습니다. 저조한 공약이행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약을 재점검하여,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확충, 정부개혁,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에 적극 나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 못된 방향으로의 정책행보를 이어나간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끝>

*<별첨1>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요약 1부

<별첨2>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세부내용 1부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요약

I. 취지

-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4년째가 되었음.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경제민주화 실현,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확대 등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4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음.
-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행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약속이기에 2015년 집권 3년차 대선공약 이행평가(완전이행률 37%)를 하였었음. 대선공약은 임기동안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사회가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는 물론,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구체화시켜 정책으로 반영시킨 것임.
- 최근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고, 경제력이 집중 심화, 고용불안정 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경색,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에서 대선공약에 대한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시 됨. 특히 박 대통령은 공약 당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복지확대, 정치개혁 등 지금 시기에 필요한 공약들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함.
-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년째를 맞이하여 공약한 20대 분야의 세부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알림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자 함.

II. 평가 개요

1. 평가대상 공약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약속
 - 경제민주화(18개), 힘찬경제(51개), 행복한일자리(48개), 창의산업(14개), 행복한농어촌(62개), 안전한사회(24개), 정부개혁(27개), 국민대통합(5개), 정치쇄신(17개), 검찰개혁(19개), 외교통일(30개), 국방(21개), 편안한삶(27개), 장애인(26개), 행복교육(77개), 행복한여성(56개), 행복주거(9개), 지속가능국가(58개), 문화가있는삶(58개), 정보통신(27개)

2. 평가 방법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2016년 2월 12일 현재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3단계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함. 비율(%)은 소수점 이하 반올림.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이며,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눔. 판단불능은 자료가 없거나, 공약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자체가 어려운 경우임.

Ⅲ. 평가 결과

1. 대선공약 이행 현황

(단위 : %, 개수)

공약 영역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 불능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3년차 (2015)	4년차 (2016)
국민대통합(5)	0%(0)	0%(0)	0%(0)	20%(1)	100%(5)	80%(4)		
경찰개혁(19)	16%(3)	16%(3)	32%(6)	32%(6)	53%(10)	53%(10)		
정치쇄신(17)	6%(1)	18%(3)	24%(4)	18%(3)	71%(12)	65%(11)		
창의산업(14)	7%(1)	14%(2)	79%(11)	86%(12)	14%(2)	0%(0)		
행복한농어촌(62)	19%(12)	19%(12)	77%(48)	74%(46)	3%(2)	6%(4)		
정부개혁(27)	22%(6)	22%(6)	44%(12)	52%(14)	33%(9)	26%(7)		
행복한일자리(48)	19%(9)	29%(14)	40%(19)	38%(18)	42%(20)	33%(16)		
편안한 삶(27)	37%(10)	52%(14)	37%(10)	41%(11)	26%(7)	7%(2)		
정보통신(27)	33%(9)	37%(10)	33%(9)	33%(9)	33%(9)	26%(7)		4%(1)
지속가능국가(58)	31%(18)	38%(22)	24%(14)	24%(14)	41%(24)	34%(20)	3%(2)	3%(2)
안전한사회(24)	21%(5)	33%(8)	54%(13)	46%(11)	25%(6)	21%(5)		
경제민주화(18)	28%(5)	33%(6)	22%(4)	28%(5)	50%(9)	39%(7)		
힘찬경제(51)	41%(21)	47%(24)	37%(19)	41%(21)	22%(11)	12%(6)		
외교통일(30)	20%(6)	23%(7)	53%(16)	53%(16)	27%(8)	23%(7)		
장애인(26)	54%(14)	65%(17)	19%(5)	23%(6)	27%(7)	12%(3)		
문화가있는삶(58)	48%(28)	41%(24)	17%(10)	41%(24)	33%(19)	14%(8)	2%(1)	3%(2)
행복교육(77)	61%(47)	64%(49)	18%(14)	21%(16)	19%(15)	13%(10)	1%(1)	3%(2)
행복한여성(56)	75%(42)	75%(42)	18%(10)	18%(10)	7%(4)	7%(4)		
국방(21)	38%(8)	29%(6)	52%(11)	57%(12)	10%(2)	14%(3)		
행복주거(9)	44%(4)	44%(4)	44%(4)	56%(5)	11%(1)	0%(0)		
합 계(674)	37%(249)	41%(273)	35%(239)	39%(260)	27%(182)	20%(134)	1%(4)	1%(7)

주) 판단불능은 공약자체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

- 집권 4년차(만 3년)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41%(273개), 후퇴이행 39%(260개), 미이행 20%(134개)로 나타났음. 반환점을 돌아 임기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완전이행률이 과반에도 못미치고 있음.

- 4대부문 구조개혁(노동, 금융, 공공, 교육) 중 핵심 즉, 노동개혁 공약인 ‘행복한 일자리’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29% 수준에 불과함. 노동관련 공약도 지키지 않으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
- 경제양극화 심화로 공약당시 핵심이슈였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함. 세부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 편취행위 근절’ 공약은 완전이행 된 것이 없었음.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재벌 총수들에게는 관대한 친재벌 정책과 원샷 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재벌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고 있음.
-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매우 저조함. 최근 국회연설에서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국민통합’을 강조하였으나, 관련된 공약의 이행률이 저조함을 볼 때,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 집권 4년차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273개(41%), 후퇴이행 260개(39%), 미이행 134개(20%)로 나타남.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하여 1년간 완전이행률은 4%p(24개) 증가하는 데 그쳤음. 후퇴이행은 약 4%p(21개)가 늘어났으며, 미이행률은 7%p((-)48개) 감소하였음. 전체적으로 미이행률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미이행 공약이 완전이행으로 전부 가지 않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최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행복주거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44%로 나타났음. 비율로 보면 낮지 않게 보일지 모르나 행복주거 공약은 처음부터 전·월세 대책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공약자체가 문제가 많았었음. 아울러 목돈안드는 전세와 같은 세부공약은 잘 못된 공약설정으로 인해 폐지까지 되어, 주택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복지공약으로 볼 수 있는 ‘편안한 삶’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나 다른 공약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표면적으로는 높게 보이지만 내용을 볼 때,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되어 공약달성을 위한 재점검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의 순임.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주로 복지공약과 교육공약 부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음.
- 완전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대다수 정치와 정부개

혁과 관련된 공약들이 대부분임.

-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하여 1년간 완전이행률은 4%p(24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후퇴이행은 약 4%p(21개)가 늘어났으며, 미이행률은 7%p((-)48개)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이행률이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미이행 공약은 완전이행으로 전부 가지 않고, 여전히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후퇴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1년간의 성과치고는 저조하다고 평가됩니다.
- 전년과 비교해 완전이행률 변화가 없는 분야는 국민대통합(0%), 검찰개혁(16%),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행복한 여성(75%), 행복주거(44%)로 조사되었음.
- 전년과 비교해 완전이행률 증가는 **편안한 삶 (+)15%p, 안전한 사회 (+)13%p, 정치쇄신 (+)12%p, 장애인 (+)12%p, 행복한 일자리 (+)10%p**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과 비교하여 완전이행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부공약들을 보면, **편안한 삶 분야**는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을 OECD '상대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 대상자,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개발, 보급(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임.
 - **안전한 사회 분야**는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 유통매장에 도입, 소규모 판매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 최우선 급식문화 조성 공약임.
 - **정치쇄신 분야**의 완전이행 편입 공약은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임.
 -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 의사소통, 문화 정보 접근권 보장,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공약임.
 - **행복한 일자리 분야**는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공약임.

2. 세부 분야별 이행 현황

(1)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18개중 6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로 28%. 미이행 공약은 7개로 39%에 달함.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은 완전이행 33%로 전년과 비교해 1개가 완전이행이 추가되어 5% 정도 증가한 것 밖에 없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정부는 법 개정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100점 만점 중 80점(국정과제 기준으로 65% 이행)을 주장하며 자화자찬 하지만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봤을 때는 이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공약영역별 세부공약 이행률이 낮은 영역은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으로 완전이행 된 것이 한개도 없음. 반면 세부공약 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3개, ‘금산분리 강화’ 2개가 완전이행됨. 지난해 롯데그룹 사태, 삼성그룹 합병 논란 등 재벌개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이나 기업지배 구조개선의 공약 이행 성적이 여전히 매우 저조함. 여기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판단 됨.
- 올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임을 고려하면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된 제도와 정책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은 실효성 논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지난해와 비교해 후퇴된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경제민주화 영역의 공약이행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공약이행이 법과 제도 개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효성 제고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2) 힘찬경제

- 힘찬경제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51개중 2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47%.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21개로 41%. 미이행 공약은 6개로 12%에 달함.
- 지난해 완전이행 41%에서 금년 힘찬경제의 공약이행이 47%로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낮음. 국민행복기금 등 일부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률은 높지만 범위와 내용이 크게 후퇴하여 사실상 후퇴이행으로 볼 수 있음. 지난해 이행률이 가장 낮았던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진전된 것이 늘었지만 애초 공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행률이 그다지 높지 않음.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부분에서는 여전히 공약이행이 예산 배정이나 법 개정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정책의 성과나 예산 집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함. 공약영역별 세부공약 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으로 3

개의 세부공약이 완전이행됨.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과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등에서 세부공약의 완전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낮은 이행률은 보임.

(3) 행복한 일자리

- 행복한 일자리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전체 세부공약 48개 중 1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29%를 기록함. 후퇴되어 이행되었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공약은 18개로 38%이며, 미이행 공약은 16개로 33%에 달함.
- 이행률이 낮은 공약영역은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등 주로 비정규직관련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행복한 일자리 영역의 중 청년공약은 완전이행 되지 않더라도 부분이행 되었거나 이행과정 중인데, 그럼에도 청년고용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지난해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였음.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이 대통령 공약설정 단계부터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 그럼에도 이중구조개선책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관련 공약 대부분이 미이행에 그치고 있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분발이 필요함.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올해부터 본격화되었지만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강행하여 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위협받게 됨. '대화과 상생의 노사관계정착'이라는 공약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정부가 노사정합의 파기 원인을 제공한 것은 큰 오점으로 지적 받을 만 함.

(4) 창의 산업

- 창의산업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전체 세부공약 14개중 2개만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이 7%에 불과함.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2개로 86%임. 이행률이 높은 공약영역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으로 각각 1개의 세부공약이 이행됨. 그 외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국민행복기술과 브레인웨어 융합신기술로 창조산업 육성' 등 영역은 모두 후퇴이행된 것으로 파악됨.
- 창의산업 분야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융합신산업 창출, 과학한류 확산 및 국격 제고와 같이 공약목표가 너무 크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도 공약이행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공약 중에는 과학기술기반확충, 신산업·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

부의 정책의지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됨. 과학기술인 복지관련 공약과 국가연구개발 투자 공약은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5) 행복한 농어촌

- 행복한 농어촌 전체 세부공약 62개중 12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19%을 기록함. 본래 공약이 후퇴되거나 부분 이행된 공약은 46개로 74%가 되어 대부분을 차지함. 미이행 공약은 4개로 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논 이모작 발작물 적용, 쌀 직불금 확대,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산림분야 일자리 자격증 개발 및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 등은 완전이행 되었음.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사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약은 진행되지 않음. 또한 농업 R&D 예산은 점차 줄고 있으며, 예산의 약 1% 정도만 배정하고 있어 부분이행에서 미이행으로 재분류함. 농어촌 공약은 기존 제도·사업 등을 활용한 공약으로 새로운 시도보다는 꾸준하게 유지 진행 되는 공약이 많았음. 또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쪼개서 공약으로 만들어져 성과여부를 명확하기 평가하기 어려움.

(6) 안전한 사회

- 안전한 사회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4개중 8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33%임.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1개로 46%, 미이행 공약은 5개로 21%에 이룸.
-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4대약 근절’ 관련 공약들의 이행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비한 지점들이 아직 존재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분야는 여전히 본질적인 부분에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약 중 경찰과 관련된 3개 공약은 대체로 이행되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것이 공안 정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있음. 세월호 참사 1주년 이후 국가안전처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주무하지만 아직 사업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된 투자가 필요함. 식품안전 분야 관련해서는 식약청을 처로 승격까지 진행하며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는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7) 정부개혁

- 정부개혁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7개중 6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22%에 불과. 대부분 공공부문 정보자원 통합·개방(정부3.0) 등에 대해 이루어짐.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4개로 52%, 미이행 공약은 7개로 26%로 나타남. 책임총리, 조세정의, 공공부문 개혁 등에서 공약 이행률이 저조함. ‘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분야는 형식상 노력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한 공약들이 대다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벌 중심 조세정책으로 서민들의 피해만 증가하는 상황으로 공약이행의 의미가 상당히 후퇴함. 또한 지하경제 규모 축소 같은 추상적인 공약은 빙투기 공약이행이 이루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구됨. ‘증세 없는 복지’가 비현실적인 정책기조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으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복지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사·정 각계각층의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은 현실성 없는 공약이 되어버림.

(8) 국민대통합

- 국민대통합 분야의 경우 공약 4개가 미이행, 1개만이 후퇴이행으로 완전이행률이 0%에 그침. 2015년에 진행한 공약이행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전혀 진전된 것이 없는 분야임. 그나마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신고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 진전된 상황임.
-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지난 2년차 평가에서도 완전이행된 공약이 하나도 없었음. 집권 전반기를 지난 이번 평가에서도 1개의 공약만이 부분적으로 이행중일 뿐, 완전히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
-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의 경우 근거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임. 곧 19대 국회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보임. 국민대통합 분야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모으겠다며 스스로 내걸었던 약속들임. 그러나 집권한 지 4년차가 된 지금까지도 별로 이행된 부분이 없어 국민대통합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이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9) 정치쇄신

- 정치쇄신 분야 17개 공약 중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11개로 미이행률이 65%였음. 지난 2년 평가의 71%의 미이행률에서 조금 진전된 3개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실상 이행된 3개의 공약인 ‘선거구 확정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과 ‘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사익추구 금지’의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공약에서 후퇴되어 이행된 것은 3개로 18%임. 공천 금품 수수시 처벌 규정과 특별감찰관제·상설특별검사제 등이 후퇴된 형태로 입법된 이후 변화된 것이 없음.
-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정치쇄신 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은 제대로 진전된 것이 없는 상황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워짐.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파기함. 정당의 공천과정 민주화 역시 20대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윤리위원회 외부인사 구성 등 말 그대로 ‘정치

쇄신'을 위한 공약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거나 오히려 파기되었다는 것은 정치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이 부재했던 것이라 볼 수 있음.

(10) 검찰개혁

- 검찰개혁 분야의 전체 공약은 집권 3년차 대선공약이행률과 차이가 없음.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19개중 3개가 완전이행 되어 완전이행률 16%에 불과.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6개로 32%, 미이행 공약은 10개로 53%에 이룸. 특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과 수사권 조정 부분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음.
- 법조계, 시민단체, 경제계, 금융, IT분야, 언론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2기 검찰개혁심의회가 15년 1월 출범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볼 수가 없었음. 검찰인사는 '정치검사'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는 코드인사 중심으로 운영. 검찰인사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사항임.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을 받을 수 없었음. 적격심사위에 회부되었던 임은정 검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좌천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반복되어 검찰인사개혁이 요원한 것으로 보임. 일부 이행된 공약들도 대부분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1) 외교통일

- 외교통일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30개중 7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 이행률 23%에 불과하고, 전년 대선공약 평가 때 보다 완전이행 1개가 늘어난 정도임.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6개로 53%, 미이행 공약은 7개로 23%에 이룸
-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통일대박을 강조했음에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경색국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또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대북강경책에 의존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역내 현안에 외교적 선택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초래함.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는 황성기 재개, 뼈라 살포 등 냉전 시기의 갈등을 재현하고 있으며, 결국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에 이룸. 특히 사드 한 반도 배치가 공식화되는 등 4차 핵실험 이후 미-중, 한-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한미관계 역시 실제 조화롭고 협력적인 동맹인지 의문시 됨. 박근혜 정부는 해외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시키는 내용의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UN결의 외 국군의 해외파병을 확대시킨 것은 물론, 9600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를 분담하면서도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조약을 체결함. SOFA 개정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음.
- '매력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개막 : 작년에 비해 올해는 공공외교 지원, 재외국민 지원 분야에서 소기의 정책적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국제평화와 개발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공공외교 분야 세부공약을 보면 작년에

비해 관련 예산을 약 40억원 증액하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일회성 행사의 비중이 높고 투입 예산에 비해 국민 호응이 크지 않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발협력 ODA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 통합적 체제 운영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12) 국방

- 국방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1개중 6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29%임. 본래 공약이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2개로 57%이며, 미이행 공약은 3개로 14%임. 작년에 비해 후퇴함.
- 국방분야 공약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북 도발 불용, 우리 군의 정신강화 등 안보위주의 강경대북정책을 반영한 듯 실제 미이행 공약이 단 3개(14%)에 불과함. 그러나 한·미연합 핵확장 억제능력 강화 공약의 경우 북핵 4차 핵실험으로 2년 평가와 다르게 미이행으로 분류됨. 무엇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소화기부터 통영함까지 국방분야의 각종 부정 부패, 방산비리가 국감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된 점은 심각한 문제임. 비리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방혁신, 민간참여 확대, 효율적 체제 개선 등의 공약에 실효적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음.
- 2015년 미국 정부가 AESA 레이더라든가, 적외선 탐지장비 같은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KF-X 개발사업도 미국이 돌연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나머지 21개도 다시 수출승인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나오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임.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공약은 매년 20%의 인상이 필요하나 15%에 머물고, 국군포로의 인도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기로한 ‘프라이카우프’ 제도의 구체적 진행도 없음. 전작권 전환 연기는 자주국방의 심각한 훼손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국가간 약속을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나 미룬 것은 심각한 문제임.

(13) 편안한 삶

- 복지공약인 편안한 삶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세부공약 27개중 14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52%로 나타남. 후퇴이행된 공약은 11개로 41%. 미이행 공약은 2개로 7%임.
- 지난해 이행률이 낮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공약으로 제시했던 세부 기준 개선은 미흡해 후퇴이행으로 나타남. 지난해 26%였던 미이행률이 7%로 개선됨.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복지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편안한 삶’은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남.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행률이 향상됨.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됨. 기초연금은 65세 전체 노인 20만원 지급에서 노인

70%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후퇴되었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3대 비급여의 일부 개선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음.

(14) 장애인

- 장애인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26개 중 17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65%로 나타남.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6개로 23%. 미이행 공약은 3개 12%임. 지난해 24%였던 미이행률이 12%로 낮아짐.
- <장애인지원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연금 지급관련 법 개정됨. 또한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권리확대를 위한 법은 제정되지 않아 미이행. 장애인 등 취약층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 영역의 완전이행률은 65%. 일자리대책 영역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통과되어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그러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개정은 이행되지 않음.

(15) 행복교육

- 교육공약인 행복교육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세부공약 77개중 판단불능 2개를 제외한 49개가 완전이행되어 완전이행률 64%로 높게 나타남.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6개 (21%). 미이행 공약은 10개(13%)임. 지난해 18%였던 미이행률이 13%로 낮아짐.
- 영역별 이행률이 낮은 ‘교원업무경감’, ‘교원 확대’ 등은 미이행으로 나타남.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 배정되지 못함. ‘반값 등록금’은 예산배정 축소로 후퇴됨. ‘사교육경감’과 ‘학교폭력대책’과 ‘체육교사 확충’은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예산배정되어 상대적으로 이행률 높음.
- 교육공약은 다른 분야보다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 박근혜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계획의 연속추진 성격의 공약이 대부분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은 올해도 예산이 배정되지 못해 여전히 추진이 불투명함. 반값등록금은 예산배정이 대폭 축소되어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분야 공약은 후퇴됨. 직무능력중심 교육과 평가제도 도입은 이루어짐.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단계적 확대 추진되고 있음.

(16) 행복한여성

- 여성공약인 행복한여성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56개중 42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75%임.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10개(18%). 미이행 공약은 4개(7%)로 나타남. 지난해와 변동 사항 없음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등 근로조건 개선을 포함하는 ‘행복한 여성’은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행률은 지난해와 변동사항 없음. 무상보육 확대 등은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배정에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김에 따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요구하며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음. 교육공약은 전 정부의 계획을 연장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음.

(17) 행복주거

- 행복주거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9개 중 4개가 완전 이행되어 완전이행률 44%. 후퇴되어 이행된 공약은 5개로 56%의 이행률을 보임. 전년과 차이점은 후퇴이행이 1개 늘어난 정도임.
- 주택관련 공약은 후퇴이행을 포함할 경우 전체적으로 이행률이 높으나, 제도시행 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제도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많음.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공약의 적절성 자체가 문제였던 공약마저도 제도가 폐지 됨.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일명 뉴스테이), 취업준비생 월세자금 융자 등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 또한 국민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평가됨. 결국 행복주거 공약은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이행률로만 판단하기 어려움.

(18) 지속가능국가

- 지속가능한 국가 공약은 총 14개 공약영역에서 58개의 세부공약 중 완전이행은 22개, 후퇴이행은 14개, 미이행은 20개 공약임.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2개는 제외함. 이행률은 완전이행 38%, 후퇴이행은 24%, 미이행은 34%임. 2015년에 비해 완전이행은 31%에서 38%로 개선(7%p)됐지만, 미이행은 41%에서 34%로 소폭 개선에 그쳤음. 지속가능국가 공약은 환경과 생태, 자원 및 에너지, 안전 등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완전이행률이 38%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미이행률은 34%에 달함.
- 물(상수도, 하천)과 공기(대기) 품질 개선, 유해물질 제거, 자연재해 방지 등의 공약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토지이용 간소화와 안전한 원전 이용에 대한 공약은 모두 완전이행을 했지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음. 또한 원전 재사용, 원전 유치 갈등, 방사능폐기장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증액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못했음. 반면 2015년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정책의지와 홍보 부족으로 전체 대상자의 45.8%만 혜택을 받고 있음.

(19) 문화가 있는 삶

- '문화가 있는 삶' 분야의 전체 공약 이행률은 세부공약 58개 중 판단이 불가한 2개를 제외하고 24개가 완전이행 되어 완전이행률은 41%, 후퇴이행되거나 이행 중인 공약도 24개로 41%의 이행률을 나타냄. 미이행 공약은 8개, 14%로 매우 낮게 나타남. 문화, 예술, 스포

츠, 관광 관련 공약의 미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 체질 개선보다는 재정 지원 확대 등 외형적 변화에 기인함.

- 문화·예술관련 공약의 내용이 재정확충, 기반조성, 권리보장, 지원확대, 사업강화 등 외연 확대 내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완전이행률이 매우 높게 나타남. 스포츠 관련 공약은 문화기업 설립, 은퇴선수 고용지원, 국가대표선수 우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태능선수촌 기능 유지 등은 후퇴하거나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은 정부 재정지원이 줄어들면서 더욱 처우가 나쁜 상황이 됨. 관광 관련 공약 역시 지원확대, 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 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관광자원 적극 개발, 관광레저활동 증진, 저가 관광 개선 등 일부분의 제도변화와 재정지원 확대로 인해 완전이행과 후퇴이행(이행 중 포함)률이 높게 나타남.

(20) 정보통신

- 정보통신분야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전체 세부공약 27중 10개만 이행되어 37%의 이행률을 보임. 후퇴이행, 미이행 된 공약 역시 각각 33%, 26%에 달함.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영역이 완전이행 공약이 각각 1개 밖에 되지 않아 세부공약별 이행률이 낮음.
- 정보통신분야 공약이행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작년과 마찬가지로 완전이행이라 평가되는 공약은 대부분 펀딩 확대 및 플랫폼 설립 등 기초적인 수준임.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이 공약의 주요 목적인 “콘텐츠산업, ‘한국스타일’의 창조”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임. 특히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도리어 「신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인터넷 매체를 통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역행하고 있음.
- “가계통신비 경감”의 경우 「단통법」 제정 및 시행을 주된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요금 인가 관련 정보와 적정성 평가자료 등 기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IV. 평가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 첫째,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여 집권 4년차를 맞았음에도 전체 대선공약이행 현황은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 273개(41%), 후퇴이행 260개(39%), 미이행 134개(20%)로 불과 임기가 2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과반도 못 미치고 있어 이행률이 저조함. 전년과 비교해도 1년간 완전이행률은 4%p(24개)만 증가하여 개선사항이 부족함.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남은 임기 동안 약속했던 공약을 100% 달성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둘째,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구조개혁(노동, 금융, 공공, 교육) 중 핵심 즉, 노동개혁 공약인 ‘행복한 일자리’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29% 수준에 불과했음. 정규직-비정규직, 고임금-저임금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최근 해고를 쉽게 하여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음. 노동시장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시급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확립,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내놓음과 동시에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
- 셋째, 정부가 80점으로 자랑하던 경제민주화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33%에 불과하여,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재벌 총수들에게는 관대한 친재벌 정책과 원샷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재벌 규제완화에만 힘을 쏟고 있음. 이러한 반경제민주화 정책은 중단하고, 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임. 경제민주화 분야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 경제력집중 심화와 끊이지 않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출자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개선, 면세점 사업과 같은 재벌 특혜사업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대책을 제시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아울러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넷째, 박 대통령은 ‘대국민 신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국민신뢰를 저버리고 있음. 대선공약집에서는 국민통합을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표현하고 있고, 정치쇄신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문화’, 정부개혁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구호로 내걸었음.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와 정부의 개혁, 국민통합에서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한 저조한 이행률은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신뢰와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는 반증임.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정부와 정치권부터 개혁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공약부터 이행함이 옳을 것임.
- 다섯째, 최근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우선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행복주거 분야는 완전이행률이 44%로 전년과 동일하고, 전년과 차이점은 후퇴이행이 1개 늘어난 정도였음. 행복주거 공약은 처음부터 전·월세 대책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아, 공약자체가 문제가 많았던 만큼, 박 대통령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여섯째, 복지공약으로 완전이행률이 52%로 나타나 높게 보이는 ‘편안한 삶’ 분야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이행률이 향상된 것에 불과함. 반면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축소 후퇴되어 시행되었다는 것을 볼 때, 공약달성을

위한 재점검이 필요함.

- 일곱째, 전년 집권 3년차와 비교해 완전이행률 변화가 없는 분야인 국민대통합(0%), 검찰 개혁(16%),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행복한 여성(75%), 행복주거(44%) 공약에 대해서는 반성과 함께, 국민대통합과 정부개혁, 농어촌 문제의 재점검을 통한 공약이행, 검찰개혁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 여덟째, 완전이행률이 증가했던 분야로는 편안한 삶 (+)15%p, 안전한 사회 (+)13%p, 정치쇄신 (+)12%p, 장애인 (+)12%p, 행복한 일자리 (+)10%p 등이었음.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 추가로 완전이행 된 세부공약의 경우 핵심의제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들이라서 지금이라도 공약전체에 대한 핵심의제를 파악하는 노력과 함께,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